

모심의 살림의 노 길

정세와 이슈

현재 진행형인 후쿠시마 사태, 우리의 선택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과제

분야별 동향

농업·먹거리 | 경제·생활 | 사회·환경 | 정치·사회운동



모심과 살림연구소

제1호
[2012_03_26]

- 목 차 -

정세와 이슈

- 현재 진행형인 후쿠시마 사태, 우리의 선택은? _ 1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과제 _ 4

분야별 동향

[농업 · 먹거리]

- 농어업 재해보험의 적용 범위 및 품목의 확대 시행 _ 6
- '품종보호제도' 전면 시행과 종자 사용 로열티 지불 확대 _ 7
- 세계 최대 곡물기업 카길의 국내 진출 본격화 _ 7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 _ 8
- 식품융복합화, 첨단과학기술과 만난 식품의 미래 _ 9
- 친환경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 _ 10
- 식생활교육네트워크의 활동 현황 _ 10

[경제 · 생활]

- 대형마트의 급성장과 소매유통 시장 생태계의 붕괴 _ 12
- 생활 경제 속으로 침투한 양극화 현상 _ 13
-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은 각국 동향 _ 14
- 다양한 유형의 신생 협동조합 등장 _ 15

[사회 · 환경]

- 주 5일제 수업 본격 시행이 주는 변화들 _ 17
-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 _ 17
- 도시 속에 부는 농업 바람, '도시농업' 활성화 움직임 _ 18
-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시작 _ 18
- 위기의 일본, '새로운 공공(公共)' 운동의 등장 _ 19

[정치 · 사회운동]

- 4.11 총선체제 현황과 녹색정치에 대한 실험 _ 21
- 탈북자 복송 문제, 낡은 이념의 틀을 넘어선 생존권 문제 _ 22
-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생명버스' _ 23
- 파국으로 치닫는 제주 강정마을 사태 _ 23
- 다시 길을 나선 생명평화 순례 _ 24

살림의 말

- 후쿠시마에서 산다는 것 _ 25

정세와 이슈 I 현재 진행형인 후쿠시마 사태, 우리의 선택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주기, 탈핵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 세계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주기를 맞아 3월 11일을 전후해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탈핵사회를 희망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림.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방사능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임신하고 있다”, “후쿠시마를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평화행진과 기자회견, 집회 등을 가졌고, 프랑스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후에도 여전히 핵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리옹에서 아비뇽에 이르는 235km의 인간 사슬을 만드는 행사를 진행함. 이 밖에도 영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각국에서 원전 반대 캠페인이 진행됨.

우리나라에서도 3월 10일 서울광장과 부산역광장에서 환경운동가, 종교인,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조합원, 시민 및 학생 등 ‘핵 위험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짐.

한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탈핵을 위한 교수모임, 법률가모임, 국회의원모임 등이 만들어졌고, 지난 2월 13일에는 서울 노원구, 인천 남구, 수원시 등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을 하고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 조례제정, 시민주도형 협동조합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구체적인 활동을 결의함.

국내 원전 사고와 은폐에 따른 충격 속에 지속되는 정부의 원전 정책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탈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2월 국내 원전 1호기인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한 달 넘게 은폐했던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낳고 있음.

지난 2월 9일 저녁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전 1호기에서 발전기 보호계전기를 시험하던 중 외부전원공급이 끊어지고 이때 작동해야 할 디젤발전기까지 작동하지 않아 12분간 발전소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도 결국 발전소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냉각수 순환이 되지 않아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 내리면서 심각한 사태로 발전한 것임.

그런데 고리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 후 한 달이 넘은 3월 12일에야 이런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절대 안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원전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의 부실함과 원전 관리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 줌.

사고가 난 고리 원전 1호기는 1978년 상업가동 이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을 멈췄다가 재가동해 오던 것임. 최근 3년간 고리원전(1-4호기 포함)에서 이번 사고까지 모두 9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국내 전체 원전 사고의 40%를 넘는 수준임. 후쿠시마 사태 역시 노후 원전의 무리한 재가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로 부산을 비롯해 원전 인근 지역 사람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특히 높아지고 있음.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의 보고 시점이 후쿠시마 사태 1주기를 맞아 탈핵 관련 시민들 집회가 있었던 3월 10일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다고 비판 하고 있으며, 나아가 3월 26-27일 서울에서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원전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3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57명의 각국 정상과 5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안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핵물질과 시설의 안전한 방호와 핵물질의 불법적인 거래 차단을 통해 '핵 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임.

우리나라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방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을 세계 각국에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부대행사로 글로벌 원전 기업과 국제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을 초청한 원자력산업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원전 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이번 고리 원전 사고와 은폐 시도가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과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크게 손상되었으며, 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방사능 누출 위험 범위 안에 있는 일본과 중국 등 이웃 국가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을 빌미를 제공하게 됨.

후쿠시마 사태가 만들어 낸 원전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

한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식은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09년과 2011년 원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원전 찬성 의견은 42%에서 16.9%, 중립 의견은 38.8%에서 23.8%로 줄어든 반면, 반대 의견은 19.2%에서 59.3%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지난 2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원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됨. 전국 15세 이상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53.5%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으며, 특히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의 연장 가동에는 7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 문제는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깊음.

올해 들어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후쿠시마 사태 이후 지난 1년 동안 일본산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7%에 불과했고, 62.5%는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방사능 검사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함. 일본산 식품 수입의 전면 금지 의견을 밝힌 사람도 26.5%에 달함.

한편, 원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정부의 원자력 비중 확대'에 대해 응답자 65%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는데, 특히 남성과 중장년층(40-50세)에 비해 여성과 젊은 세대(15-30세)의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원전 비중이 낮아져 발전량이 감소하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참여 하겠다'는 응답이 87.7%로 높게 나타났고, 이 중 33.5%가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정세와 이슈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과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

작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들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번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 낸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자립적인 생활기반 조성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자리하고 있음. 생협을 비롯해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단체들이 기본법 제정 과정에 함께 한 이 유도 여기에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예상되는 변화로 무엇보다 협동조합의 설립이 보다 쉬워지고, 설립 분야도 확대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게 된 점을 들 수 있음.

오는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게 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즉 영세·소상공인,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특수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그 분야도 먹거리, 보건·의료, 공동육아는 물론 주택·에너지, 통신, 문화·예술·여행·스포츠 등으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이나 자활 등 기존에 활동해 오던 단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고, 기존 협동조합들 가운데서도 그동안 개별 협동조합법의 틀에 묶여 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됨.

결국 제도적인 변화와 사회적 필요, 조합원의 욕구들을 모아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어떻게 실현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함.

협동조합의 새로운 활성화를 위한 과제

새롭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협동조합들이 자리를 잡고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음.

먼저, 협동조합이 초기에 자리를 잡는 데 있어 조합원과의 '신뢰' 형성은 가장 중요함.

이를 위해 협동조합이 가진 가치와 의미, 역할에 대한 조합원 교육, 경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조합원 참여의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함.

나아가 기본법에 따라 새로 설립될 협동조합들이 지속가능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필요함. 현행 기본법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에도 기존의 주요 협동조합들처럼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협동조합이 잘 정착된 나라들의 경우 협동조합은행, 인민금고 등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제정된 기본법에는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사업 외에 금융, 보험, 신용사업은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또한 협동조합 특성을 고려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 지원부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다만 정부의 지원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 영역의 고민과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

한편,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의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가 필요함.

그동안 민간 자율적인 노력으로 일구어 온 사회적 돌봄노동과 자립지원 활동들이 제도화를 통해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결과,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자립 기반은 취약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자활이나 사회적기업의 많은 경우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낮은 노동 효율과 영세성으로 시장의 경쟁체제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생존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음.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될 협동조합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어 스스로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협동조합이 가진 사회경제적 의미를 적극 발굴해 알려내고,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내부 거래를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동향 1

농업·먹거리

● 농어업 재해보험의 적용 범위 및 품목의 확대 시행

정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재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돕고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 추진키로 함.

정부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1년 40개 품목에서 올해 61개 품목으로 확대(신규 시범사업 실시품목 11개 추가)하고, 예산도 200억 원 증액된 1.567억 원을 반영하여 보험가입률을 높이기로 함.

하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심화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지원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농가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21%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이마저 사과, 배 등 일부 과수 농가들이 다수여서, 그 외 농가의 가입률은 10%에 미치지 못함.

이유는 재해 종류를 태풍, 강풍, 우박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농가 경제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큰 데 반해, 피해에 대한 보상 수준은 턱없이 낮기 때문임.

재해보상이 실질적 손실보전이 아니라 재파종이나 재입식에 필요한 대파비용, 농약비용, 시설복구 등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런 가운데 농민들은 농협이 약관을 변경해서 해가 갈수록 보험혜택은 줄어들어 “2010년 피해율 80%를 보장하던 농작물재해보험이 2011년 70%로 줄어들더니 올해는 50%까지 대폭 줄어들었다”고 토로하고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재해보험제도를 국가 보상제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보험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목별 특성과 친환경 농업과 같은 생산 방식의 특성을 고려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전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품종보호제도’ 전면 시행과 종자 사용 로열티 지불 확대

종자는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뿌리이자 기원임. 전통적으로 농민들은 오랜 시간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야생종을 길들여 왔고, 씨앗을 뿌리고 다시 거두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지혜를 터득해 왔음. 따라서 각 지역 토착지식은 종자라는 자원과 더불어 먹거리 생산의 역사를 통해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었음.

하지만 오늘날 종자는 농민의 손을 떠나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음.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종자시장을 통제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종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이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노력도 부족했음.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2년 1월 7일 식물신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는 ‘품종보호대상작물’ 고시를 개정해 발표함.

이는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1968년 설립된 국제연맹에 우리나라가 2002년에 가입하였는데, 10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협약에 따라 올 1월부터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특허제도인 품종보호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됨.

이에 따라 그동안 품종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작물(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을 포함해 모든 식물이 확대 시행되는 품종보호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게 됨. 따라서 한미FTA 발효와 함께 농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정부는 품종보호제도의 전면시행에 대응해서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약 5천억 원을 들여 소위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종자를 농업의 반도체로 만들어 종자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이 과연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성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세계 최대 곡물기업 카길(Cargil)의 국내 진출 본격화

세계 최대 곡물기업 카길이 작년 11월 말 충청남도와 유지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음.

카길은 곡물 사일로(곡물을 보관하는 탑형의 곡물저장고)와 사료공장을 짓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양곡부두에 2013년 완공을 목표로 대두 가공공장 건립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음.

세계 곡물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카길은 육가공, 소금, 파스타, 주스, 코코아 등의 식품에도 진출해 있는 세계적 거대기업으로, 막대한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곡물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건립될 카길의 대두가공 공장은 연간 처리기준 75만 톤의 국내 최대 규모여서, 2013년 본격적인 식용유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CJ제일제당 등을 제치고 국내 식용유업계 1위가 될 전망이다.

또한 식용유를 짜낸 후 부산물인 대두박을 처리해 사료생산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사료시장 점유율이 지금의 2배로 늘 것으로 예상됨. 카길이 소유한 카길애그리퓨리나는 현재에도 국내 사기업 사료시장의 10%를 점유한 1위 사료 업체임.

곡물저장과 수출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곡물무역, 농자재, 사료, 식품, 건강보조제에 금융업까지 확장하고 있는 카길의 국내 진출은 아시아의 식량 시장을 관장할 물류기지로써 한국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동안 카길을 비롯한 곡물메이저들이 자유무역의 선봉장 역할을 해 온 만큼,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된 상황에서 곡물 유통시장을 장악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 카길 같은 다국적 농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정부는 축산물의 품질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8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함. 이에 따라 올해 3월 20일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하여 기준에 따라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2013), 식용계(2014), 한우와 젓소(2015)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정부가 정한 인증기준에는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등 동물에 대한 5대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산란계 경우,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식과 출하, 백신구매 및 사용 등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사육장은 모든 닭이 편안하게 날개를 뻗을 수 있도록 바닥 면적 1㎡당 9수 이하로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는 1400여 산란계 농가 중 50여 농가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대규모 농장보다는 작은 규모의 농장이 동물복지형으로 전환이 용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또한, 개정 동물보호법 발효에 따라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기존의 5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2013년부터는 동물등록제를 의무화 함.

‘동물대체시험법’도 도입하여 ‘농약의 등록 기준’을 일부 개정해 농약과 의약품,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등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하등동물 혹은 인공세포로 대체해 동물의 고통을 줄이도록 할 방침임.

한편,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부리다듬기(부리자르기)’ 허용 금지, ‘머느리발톱 자르기’ 관행 금지, 농장 닭들의 ‘적정 사육온도 제시’, 인도적인 운송과 도축, 인증심사 결과의 소비자에 대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식품융복합화, 첨단과학기술과 만난 식품의 미래¹⁾

최근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식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소위 ‘식품의 융복합화’로, 지난 2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미래 식품산업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바 있음.

‘식품의 융복합화’란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 생명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로봇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총 동원해서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 성분을 알아내 변형시켜 새로운 품질을 갖춘 식품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식물과 동물 개체의 성장 과정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을 말함.

이와 관련해 전북 김제시에 2015년까지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를 조성해서 생명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을 활용해 막대한 양의 유전자 정보를 발굴해 관리하고, 분자 수준의 유전자 부위를 변형시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또한 전북 익산시에는 LED클러스터를 만들어 반도체를 이용한 빛 조절로 동식물의 성장 과정을 조절해 출하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식물공장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등 전라북도 차원에서 식품의 융복합화를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GMO의 안전성과 환경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식품개발이 과연 국민의 식생활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1) 이 주제는 연구소에서 김훈기 교수(서울대 기초교육원, 과학기술학)에게 의뢰해 작성된 내용을 압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연구 과제를 통해 다루어 소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실생활에 밀접하고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첨단과학기술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는 접근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현실인 만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특히 먹거리 안전과 바람직한 식문화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는 생협 조합원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친환경 식품 시장이 성장해온 상황에서 최근 들어 친환경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2011년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유기농 식품의 안전성 논란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앙대 하상도 교수는 2011년 유럽의 장출혈성대장균 사건을 소개하면서 유기농산물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 위험을 제기했고, 미국에서 실시된 식품원인 질병 조사 결과 식품 오염 원인의 90%가 세균, 6%가 바이러스로, 화학물질은 단지 3%로 나타났다고 소개.

한편,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홈페이지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시민들 스스로 생활 속 방사능을 계측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차일드 세이프'(child save) 같은 단체를 만드는 등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감시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한살림, iCOOP, 두레생협 등 대표 생협단체들이 지난해 말부터 두부와 유부 첨가물인 응고제에 포함된 일본산 원료가 문제가 되자, 조합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생협에서 두부와 유부 첨가물을 개선한 사례도 있음.

이처럼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잔류농약과 항생제 중심에서 방사능 오염과 병원성 미생물 등 신규 유해물질로 확대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도 올해 '신규 위해요소 및 소비자 관심분야 중심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침을 밝히고, 식품 방사능 물질 조사를 400건에서 1500건으로, 유해미생물 조사를 500건에서 1000건으로 각각 확대 실시할 계획임.

● 식생활교육네트워크의 활동 현황

지난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설립한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지난 2월 제 3차 정기총회를 갖고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관협력, 연구조사 등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함.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에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한살림은 2012년 활동방향으로 '사회와 함께 한살림다운 밥상살림 교육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유아·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밥상살림교육, 제철요리 프로그램과 대중강좌, 생산자 강사교육과 교육활동을 위한 워크북 제작 등 밥상살림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음.

관련해서 3월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에서 한살림 식생활 교육강사 양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서 배출된 강사들이 지역 내 학교나 방과후 센터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분야별 동향 2 경제 · 생활

● 대형마트의 급성장과 소매유통 시장 생태계의 붕괴

지난 10년간 대형마트가 소매유통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급속히 성장해 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2007년부터 전통시장을 앞질러 그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음.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대형마트	25조7천억	28조3천억	30조1천억	31조2천억	33조7천억
전통시장	29조8천억	26조7천억	25조9천억	24조7천억	24조

여기에다 최근 농협은 직영 하나로마트를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국방부도 군에서 운영하는 영외마트에 SSM 영업을 연내 1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함.

또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기존 대형마트는 근래 들어 온라인 쇼핑몰 매출의 급속한 확장으로 전국단위의 거대 유통업체로 변모하는 등 소매 및 유통시장 전반이 자본집중과 규모화를 통한 이윤극대화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소매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붕괴, 최저가격 유지를 위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소수 기업에 대한 부의 집중과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대형마트의 확대 진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대형마트 한 개가 전통시장 다섯 개의 매출을 잠식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음.

또한 지난 2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대형마트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의 확장은 친환경농산물을 주요하게 취급하는 생협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한편, 대형마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나서고 있음.

총선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대형마트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도 지역별 상인연합회 등을 만들어 총선 국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전통시장 부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물류기능의 공동화와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건립을 모색하고 있음.

하지만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고 ISD재협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대형유통 업체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생활 경제 속으로 침투한 양극화 현상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중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5%로 나타나, 농산물 및 석유류가 물가지수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과 더불어 양극화도 더 심해지고 있음. 지난해 4/4분기 통계청 조사에서 지니계수가 0.342²⁾로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하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전체 소득을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7.86배로 나타나,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통계청 자료 보다 실질적인 소득불평등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4분기 기준으로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일수록 저축액 대비 총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자산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저소득층의 저축 여력은 더욱 줄어들고 부채는 계속 증가해서 경제, 건강 복지, 식품, 의료, 주거 분야의 양극화 추세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건강복지와 관련해서도 계층간 격차가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로 나타남.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은 늘지 않는데 의료비는 상시적으로 소요되고 있음. 여기에다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소염진통제, 우황청심환, 종합비타민, 청심원, 소화제 등의 약값이 3월 1일부로 일제히 인상되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양극화가 가장 높게 체감되는 곳은 식품분야 임. 식품 물가의 상승으로 지난해 저소득층 가구의 앵겔계수³⁾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13%로 5분위(상위 20%)의 31.62%보다 13.51%나 높았으며, 2011년의 의식주 필수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도 지난 9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2) 지니계수는 보통 0.4 이상일 경우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함.

3) 앵겔계수는 소비지출 중에 식료품과 비주류음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은 각국 동향

2012년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해 진행하고 있음.

활동 내용들로는 '출판물 제작'(세계 100곳의 협동조합 소개), 'PR 상품 제작 판매'(기념우표, T셔츠, 재활용 가방, 스티커, 배지, 깃발, 캘린더 등), '상품에 IYC 로고 부착', '협동조합 물건 구매의 날' 마련, 이메일 서명란에 IYC 소개, 이벤트(축제, 자전거 투어, 문화 행사, 스포츠 행사 등) 개최, 협동조합 노래와 영화 제작,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캠프, 장학금 지급) 등 매우 다양함.

세계 협동조합의 해 관련 국가별 활동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국가	내용
영국	'로치데일 개척자들의 이야기'(가칭)가 영화(52분)로 제작될 예정이며, 가을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협동조합 세계 페스티벌에서 상영 예정.
일본	이탈리아 협동조합(Coop Italy)과 와인 공동개발 및 판매. 11월 중 협동조합 페스티벌 개최.
미국	미국의 노동자협동조합의 하나인 "The Toolbox for Education and Social Action, Inc."가 협동조합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게임 "Co-opoly"를 개발하여 발매 중. 게임을 통해 민주적인 사업운영과 팀워크 능력 등을 배울 수 있음.
싱가폴	싱가폴의 전국 협동조합 연맹은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에게 "협동, 자조, 호혜, 커뮤니티, 배려" 등 협동조합운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이야기책을 발간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 IYC 폐막 행사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00개 협동조합 리더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열어 협동조합의 가치와 미래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
캐나다	"Show Us Your Co-op!" 라는 제목으로 사진 경연이 개최되고 있음. 응모 작품은 IYC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
멕시코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IYC의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전국 복권 협회를 통해 IYC을 기념한 복권을 발매 중.
호주	세계 최초의 2012 IYC 기념주화 (1달러)를 2012년 1월 1일에 발매함.
가나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8개 아프리카 풋볼 클럽 네트워크인 샌랜더스(Sandlanders)는 비 아프리카 풋볼팀 4곳을 초대해서 7월에 풋볼 토너먼트를 열 계획임.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 관련 단체들이 뒤늦게 준비위원회 구성해 7월 첫 주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별로 토론회 등 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

● 다양한 유형의 신생 협동조합 등장⁴⁾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대표적인 몇 곳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단체명	소개
한국소비자협동조합 연합회(한소연) http://www.kococo.org	· 한소연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주부클럽연합회' 등 전문 소비자단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 실현을 목적으로 올해 1월 초 설립. · 1차 농산물 외에 2, 3차 산업의 유통, 금융, 의료서비스 분야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하여 '소셜커머스형 공동구매', '친환경사업 및 의료소외계층 복지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활동으로 계획하고 있음.
서울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시민사회 활동가, 교사 등이 모여 지난 1월 중순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3월 27일 창립총회를 할 예정임. · 서울시, 시교육청, 발전회사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서울의 학교와 공공기관 지붕 50곳에 5메가와트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발전소를 세워 수입금의 10%는 조합원에게 나눠주고, 남은 이익금은 에너지 빈곤층을 돕는 계획도 가지고 있음.
여행생활협동조합 http://www.tcoop.so	· '여행생활협동조합'은 공정여행, 체험여행, 친환경여행, 건강여행 등을 통해 농어산촌과 도시 조합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문화서비스를 연결해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년 10월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생활협동조합 법인 인가를 준비 중임. · 조합원 상호간에 여행에 필요한 방이나 집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마련하고, 비용은 화폐 외에 일손 돕기나 재능기부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자립음악생산자조합 http://jaripmusic.org	· 인디 음악의 독자적 유통을 시도하여 소규모 음악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협동조합. · 음악가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음반 제작에서 공연기획까지 조합원의 힘으로 음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음반을 내리는 음악가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임.
민달팽이 유니온 http://snailunion.com	· 연세대 학생들에게 자취와 하숙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를 도우며 반찬도 함께 만들어 나누며, 연대 생협이 지원한 '민달팽이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학기마다 60만원씩 지원해 줌. 주거문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자문도 돕고 있음.
수원지역자활공제 협동조합	· 수원지역자활센터가 신용불량이거나 담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고, 최소한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작년 10월부터 협동조합을 준비 중임.

4) 「작은 것이 아름답다」(2012. 2), 「협동조합네트워크」(57호, 2012. 2)와 관련 단체 인터넷 소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 조합원은 담보나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오는 4월 말 창립 총회를 계획하고 있음.
'주택건설협동조합' 세미나팀	· 2011년 9월부터 매월 주택건설협동조합 세미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기노채 아틀리에(주)'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 준비 중임. · 우선 건설협동조합을 만들고 향후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건물의 품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인 건설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마곡 사람들	· 농적 문명과 가치를 회복하고 협동과 자급의 지역순환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마곡사와 전국귀농운동본부가 협약을 체결. · 마곡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농지 100만평을 내놓고, 귀농자들에게 경작권을 부여함. 농지는 농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이용자들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할 계획임.
살림의료생협	· 20-30대 비혼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2009년 1월 여성주의 의료생협 준비모임을 시작해 올해 2월 창립총회를 개최함. · 주치의 방식으로 1차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향후 건강검진센터도 열 계획임.
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	· 남산 자락 해방촌에 '해방촌게스트하우스 빈집'에 살고 있는 장단기 투숙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빈고'라는 금고를 만들어 운영함. · '빈고'에 모인 돈은 '빈집'의 전세자금 대출과 투숙자들에 대한 소액 대출, 삼인삼 방식의 생협물품 취급, 차와 식사를 파는 '빈카페' 운영 및 '해방계' 모임을 지원. · 2012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도시텃밭 농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계획임.

분야별 동향 3 사회 · 환경

● 주 5일제 수업 본격 시행이 주는 변화들

올해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주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학교별로 시행하는 토요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프로그램들이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문화·예술 및 생태 체험, 역사기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민간 위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주말농사학교, 가족단위농사체험 등 관련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한편으로는 주말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새로운 사교육 시장으로 연결되어 교육불평등과 또 다른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생협 차원에서는 주말농사학교, 텃밭 및 체험교육 등 젊은 세대 또는 가족 단위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활동 영역을 새롭게 확장하고 생협의 고령화 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정부 차원에서 가해자 감시와 처벌이라는 강경책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음. 처벌식 접근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

관련해서 학교폭력을 사회문제로 일찍이 고민했던 일본의 경험과 제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지난 3월 15일 하자센터에서는 '청소년 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한·일 교육포럼이 열림. 이날 일본의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야마모토 교수는 '이지메와 부등교(不登校)'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자해와 자살을 시도한 일본 청소년들의 구조적 원인을 사례를 통해 소개함. 그는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에 만연해있는 '경쟁'을 꼽았는데, 학교에서부터 남을 딛고 올라서도록 강요받고 1등만 기억되는 시스템에서 학교폭력이란 산물도 나온다고 지적함.

또한 학교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둘러싼 관중과 방관자 등의 복잡한 관계망이 존재하는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해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주의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함.

결국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공통된 해결 방식은 경쟁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 등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주되,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경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교실을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도시 속에 부는 농업 바람, '도시농업' 활성화 움직임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도시농업 공동체를 선정해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6월에는 농촌진흥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임.

서울시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조성, 한강공원 텃밭 조성,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등 자치구와 연계한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각 자치단체별로도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고 텃밭보급, 강좌, 도시농장 시범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임.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한 전국의 자치구는 2011년 21개에서 올해 40여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흐름과 함께 전국귀농운동본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등 전국의 25개 도시농업 활동 단체들로 구성된 '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3월 8일 출범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도시농업 공원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시작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4)의 은퇴 후 귀농이 증가하고, 30~40대가 여기에 가세해 귀농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 2011년 귀농·귀촌 가구가 1만 503가구로 전년 대비 2.6배 늘었으며, 2012년 2만 가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게 됨.

농촌진흥청은 귀농귀촌 상담을 도와주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www.returnfarm.com)를 설치하고 3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

정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귀농귀촌 교육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귀농귀촌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6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정책은 물론 민간단체 제공 정보까지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농촌이 공동화되고 생산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은 바람직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다만 지속가능한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

● 위기의 일본, '새로운 공공(公共)' 운동의 등장

일본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오랜 기간 저성장 체제가 지속되어 오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자는 40%에 달하고 있음.

모자 가정의 빈곤률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고, 빈곤은 대물림되고, 자살자는 연간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생명의 근원인 농업은 후계자 없이 고령화되어 식량자급을 위협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현재 일본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게 됨.

하지만 난관을 딛고 일본 사회 전반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움직임들 또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적 소명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중요하게 형성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들이 공공행정 영역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공동 경영하는 '새로운 공공'(New Public) 운동이 나타나고 있음.

'새로운 공공'은 하토야마 전 수상이 행정개혁 방안으로 주창하면서 널리 알려졌으며, 시민들이 만들어 낸 자발적 공동체와 협동적 문제해결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이미 그 단초는 1995년 6천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한신 대지진 때 확인한 바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시민사회에 불고 있는 자원봉사와 기부문화의 확산과 맞물려 새로운 공공 운동을 통해 시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행정은 시민사회를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음.

새로운 공공 운동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일본 사회의 고민은 우리 현실과도 맞닿아 있음.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서비스와 일자리의 생산 및 나눔에 있어 시민사회의 대안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도시공동체,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시민참여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자발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행정은 이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정책 및 지원 활동에 있어 변화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분야별 동향 4

정치 · 사회운동

● 4.11 총선체제 현황과 녹색정치에 대한 실험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들어감.

당초 여야 정치권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고려하여,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정치개혁과 공천혁명을 예고했고, 당명을 바꾸고 통합과 분화를 통한 당의 조직체제와 경선 방식을 바꾸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왔음.

하지만 후보자 공천 진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한 유권자들은 높았던 기대감만큼 실망감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및 탈법 논란과 부적격 인사의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연이어 나오고, 명분으로 내세웠던 도덕성과 정체성은 희석된 채 계파별 기득권 싸움이 벌어지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했던 새신은 물 건너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주의나 복지 관련 이슈는 오히려 묻힌 반면, '핵발전 지속 vs 탈핵으로의 전환', '한미FTA 발효 vs 폐기', '제주 해군기지 강행 vs 중단' 등 주요 국가정책을 둘러싼 '가치 갈등'들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기에도 이번 총선 결과가 연말 대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익을 넘어선 가치 갈등의 후유증은 선거 이후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이번 총선 준비 과정과 여야 주요 정당들의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먹거리와 농업, 협동경제 같은 생활과 밀접한 의제들이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은 주목해 볼 부분임.

이런 가운데 '탈핵'과 '농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녹색당'이 3월 4일 창당대회를 마치고 이번 총선에 참여하고 있음. 녹색당은 기존에 원전 6기가 있는데다 신규 원전부지로 추가 지정된 경북의 울진·봉화·영덕·영양 지역에서 여성 농민 박혜령씨와, 고리 1호기 원전이 있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에서 환경운동가 구자상씨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고 있음. 또한 에너지 전문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이유진씨와 가톨릭농민회 등에서 농민운동을 해왔고 현재 팔당공동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훈씨가 녹색당 비례대표 1, 2번으로 나옴.

● 탈북자 복송 문제, 낡은 이념의 틀을 넘어선 생존권 문제

중국의 탈북자 복송 문제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탈북자의 인권과 복송을 둘러싼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 이번 경우는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예사롭지 않음.

지금껏 탈북자 문제는 보수 지향의 정치인과 인권단체, 종교인들이 주로 제기해 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대중 연예인들이 탈북자 복송 반대 캠페인에 참여하고, 안철수 교수의 지지 방문, 인터넷 서명운동, 단식 농성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폭이 상당히 확장된 모습임.

정부 차원의 대응 방식도 예전과 다른데, 우리 정부는 UN인권이사회에 탈북자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 외통위에서는 탈북자 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도 통과 시켰음. 또한 국회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 앞에서 탈북자 복송 문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북한대표단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음.

탈북자 복송 문제를 두고 한중간 입장차에 따른 외교적 갈등도 크게 불거지고 있음. 우리로서는 국내법상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를 가지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독립된 주권국가인 만큼 우리나라가 탈북자의 국적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정치가 아닌 경제적 문제로 불법 월경한 사람들로 보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중국은 북한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해 탈북자 문제를 난민화, 국제화시키는 데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보수진영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려는 반면, 진보진영은 탈북자 문제가 쟁점이 될수록 이들의 인권과 생명은 오히려 위협받는 역설적인 현실을 고려해 조용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진보와 보수 모두 탈북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이념과 정치의 현실적 이해관계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

북한의 경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체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복송될 경우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것은 김정은 체제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3대 멸족'과 같은 말이 공공연히 등장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음.

탈북자들 대다수는 먹고 살기 힘들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착을 돕는 노력은 중요함.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들이 고향과 부모형제와 이별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임.

이점에서 남북 관계개선과 실질적 대북지원 활동에는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이었다가 탈북자 문제에는 적극 나서는 현 정부나 정치권의 모습도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움.

탈북자를 포함하여 인간 생존의 절박한 문제는 어떤 이념이나 이해관계의 틀 속에 묶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진보와 보수의 틀을 넘어서 '생명'의 가치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과 해결 노력이 필요함.

이 점에서 탈북자를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생명운동 차원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대결의 낡은 틀을 넘어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살림의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준비된 대안의 목소리가 나올 필요가 있음.

●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생명버스'

강원도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찾아가는 생명버스가 작년 12월 10일 1차 운행을 시작으로 2차(1/7), 3차(2/11), 4차(2/25), 5차(3/17)까지 지속적으로 운행되어 옴.

회차마다 15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생명버스를 타고 골프장 건설 예정지인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강릉시 등을 찾아 건설 예정지를 함께 돌아보고 항의방문과 반대집회를 가짐.

골프장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농약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과 유기농 인증 취소, 농지 강제수용,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무분별한 벌목과 토목공사로 인한 산림 유실과 멸종위기종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음.

생명농업을 지켜 온 한살림은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움직임에 대해 한살림연합 차원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3/8), 3차 생명버스에는 한살림성남용인 실무자, 활동가, 조합원들이, 5차 생명버스에는 한살림연합 실무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음.

● 파국으로 치닫는 제주 강정마을 사태

3월 7일 제주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에 대한 1차 발파 이후 지역주민과 평화활동가 70여 명이 진행되는 등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반대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활동가에 대한 강제 출국과 항의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가 논란이 되기도 했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내외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종교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농민 및 노동자단체 등 각계 인사들의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발파 중단을 요청하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지사는 공사보류와 재검증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해군은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 해군 및 개발업체간의 갈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확산되어 4월 총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다시 길을 나선 생명평화 순례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어야 함을 압니다”라는 생명평화서약문을 바탕으로 활동해 온 ‘생명평화결사’가 ‘2012 생명평화 백년 순례’에 나섬.

생명평화결사는 생명평화를 가꾸고 실현하고자 결의한 사람들의 연대로, 2001년 2월 16일 ‘좌우익 희생자와 못생명 해원상생을 위한 범종교계 100일 기도’에서 시작되어, 그동안 ‘생명평화학교 개설’, ‘생명평화대회 개최’, ‘생명평화서약운동’, ‘탁발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음.

스스로 숙식 해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순례단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제주 전역을 일주하는 순례를 진행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 부산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 순례, 6월부터 8월 15일까지는 통일전망대에서 연평도까지 DMZ순례, 8월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연평도에서 진도를 잇는 서해안 순례, 10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도에서 진해까지 남해안 순례를 이어가면서, 지역별로 생명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생명평화순례학교를 열 계획임.

살림의 말

후쿠시마에서 산다는 것

요시다 마리카(후쿠시마 거주 여성)

후쿠시마에서 산다는 것
 내가, 후쿠시마에서 산다는 것
 나에게, 후쿠시마에서 산다는 것은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하는 습관이 없어진 것
 빨래를 밖에 말릴 수 없다는 것
 텃밭에서 수확한 야채를 버린다는 것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선량계와 마스크를 챙겨 나가는 어린 딸 모습에 가슴이 저리다
 는 것
 저 눈부신 흰 눈을 만져볼 수 없다는 것
 "힘내자 후쿠시마" 슬로건에 때때로 희미한 초조감을 느낀다는 것
 어느새 호흡이 가늘어진다는 것
 후쿠시마에 사는 것을 누군가가 묻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아직 선량이 낮기
 때문에 ..." 라고 설명해버리는 것
 후쿠시마에는 후쿠시마(福島)와 FUKUSHIMA(알파벳)가 있다는 것
 후쿠시마에 "머물러"라고 하면 "사람의 생명을 뭘로 보는 거야!"라고 외치고 싶고
 "피난하라"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마! 우리도 사정이 있다고!" 라고 외치
 고 싶어지는 것
 6살짜리 내 딸은 결혼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되는 것
 후쿠시마에 살고 있다는 선택의 책임을 팽개치고 싶어지는 것
 우리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으로 유지되는 살얼음 같은 "안전" 위에 있다는 당
 연한 현실을 날마다 뼈저리게 이해한다는 것
 내일 이 집에서 멀리 떠날지도 모른다고 밤마다 생각하는 것
 그래도 내일도 이 집에서 살 수 있기를 밤마다 비는 것
 어쨌든 딸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것
 그 검은 연기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래도 나날을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있다고, 누군가한테 이해받기 원하는 것
 날마다 화내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것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호

발행일 2012년 3월 26일

발행인 박맹수

발행처 모심과살림연구소

(100-412)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http://mosim.or.kr>